

96년 한국경제의 선택

김 대 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제 요지

1. 95년 회고

일단 거시경제 통계상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물가도 4.5%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안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대외적인 요인 덕분이다. 우선 우리 수출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엔화가치가 최근에 와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음에 세계경기가 94년 말, 95년 초 각 연구소들의 전망보다 양호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났다. 이것이 내수의 확대를 유발한 것이다. GNP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보아 소비, 투자, 정부부문, 수출 등인데 여기에서 소비도 많이 늘어났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와는 괴리가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측정할 때 품목과 가중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한편 전반적인 호황이라고 하지만 부문별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새 이야기하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그것이다. 대기업과 전자산업 등은 활황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대중소비재시장은 침체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서민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생활상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96년의 한국경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각 부문별로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2. 96년 전망

각 연구기관들은 세계경기는 확대추세에 있고 선진국의 경우 95년보다 0.3% 정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특히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엔화는 현재 달러 당 107엔 정도로 올랐는데 이 정도가 현실적인 수준이고 이 선에서 안정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때 정부는 제도개혁을 우회하거나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도개혁은 규제완화 등 친자본적 개혁에 그칠 것이다. 물론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규제완화하면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자본측의 신경영전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특히 사무직의 경우 사무실 구조를 변화시키고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집기를 교체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혁신을 다그칠 것이다. 인사제도 개편 등의 신경영전략도 확대될 것이다.

특히 노동부문에 대한 개선은 별로 기대하기 힘들고 복지부문도 청와대에 복지담당 부서를 신설하기는 했지만 생색만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 복지 수혜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요사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경기 연착륙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국 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구조적인 불균형, 불안정이다. 특히 95년에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어 설비투자 등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9%대에서 7%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적인 동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WTO체제 아래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적응력을 갖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종간, 규모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중소기업 업종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패턴의 불균등, 고압화 등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기 양극화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을 갖고 있다. 이른바 시장 논리를 내세운 적자생존의 원리가 관철될 것이고 이것이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자, 조선, 석유화학 산업은 활황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철강, 섬유, 경유, 물량이 확대될 것이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그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신발, 염색, 직물,

전자부품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 면에서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신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신장률이 95년의 반박에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대선전국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이것을 대개도국 흑자로 메우는 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및 서민생활을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의 물가목표 4.5%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산하 연구소들의 물가지수 산정방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다. 우선 정치적으로 4월 초에 선거가 있고 또 올해 초에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다가 취소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시기를 선택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본다. 원자재 가운데 원유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경제개혁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의 개혁은 자본논리에 충실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것도 원리적인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했다. 이 자본논리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활개선이나 제도개선 요구를 공격하는 논리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법, 노사관계제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문제를 언론에서는 노노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정부, 대자본 개혁요구투쟁이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조직역량, 지도력이 주요한 변수이긴 하다.

3. 96년의 선택

이렇게 본다면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협소하다. 정부와 자본이 내세우는 단기적 현실주의 논리가 득세할 것이다. WTO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계속 전파될 것이고 이 부담이 노동, 서민생활 부문으로 전가될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곧 기업가, 정부의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자본에도 대자본, 소자본 등 여러 분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논리는 대자본, 재벌의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논리이다. 재벌체제 속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 운용을 하는 것은 단기적 생산효율을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 배분효과는 악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재벌체제의 혁파 없이는 효율 제고도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의 재벌체제는 경

쟁체제가 아니라 패권주의이다. WTO체제 아래서는 이런 식이 통하지 않는다. 개방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대자본이 들어오면 기존의 재벌 중심 경제 운용은 더욱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해체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의 경우 자본가들이 초기에는 혁명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우리의 재벌은 사회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주요한 행위자이다. 또한 현재의 '노사관계 안정'은 불안정 요인을 방치하자는 것인데 이래서는 장기적인 효율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재벌체제 해파와 노사관계 개혁은 경제적인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질의 · 응답

현재 시장논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이다. 그래도 자유경쟁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은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이고 장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문제는 시장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다시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방향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냐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재벌들의 힘은 더욱더 커진 느낌이다. 재벌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현행법 체계 아래서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벌체제는 불법이다. 재벌그룹 회장은 명예직이고 공식직책이 없는데도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상법상 이것은 불법이다. 또 내부거래, 상호출자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공공연하게 한다.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거나 실체를 인정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재벌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나는 재벌해체를 각 기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재벌재산을 몰수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자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와 내부거래를 봉쇄해야 하고, 기업 상호간 업무조정과 협력적 통제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재벌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물 안에서의 이야기이다.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다보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틀림없이 제기된다. 미리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벌체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에도 그룹이 있지만 우리와 같이 혈연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부 규제 완화의 향후 전망은?

WTO체제 아래서 외국자본의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규제에 대한 저항도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도 더 확산될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신보수주의는 70년대부터 성하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쇠퇴했으나 사회주의의 쇠퇴에 따라 부흥했다. 80년대 중반에 대처가 물러났는데 이는 진보적 세력의 투쟁성파가 아니었다. 대처식의 보수주의가 영국의 전통적인 보수파들에 의해 밀려난 것이다. 신보수주의 쇠퇴는 곧 전통적인 보수주의 회귀와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퇴조 이후 다시 등장했다. 특히 미국은 신보수주의를 경제적 지위를 만회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그 자체가 빛는 문제점과 모순의 확대·발전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TO체제 아래서 사용자측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사하면서 이를 노사협력, 노동자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운동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신보수주의적 자본 논리가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자들이 국가간의 전쟁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세계노동운동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총을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경제전쟁을 치르도록 강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들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인 경쟁력 기반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일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 경제전쟁에서 지는 경우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방안은?

중소기업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청 신설, 융자 확대 등 지원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원자금에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이 흘러들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배치된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 하면 자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정도 자격을 갖춘 기업은 오히려 지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하나는 담보대출제도이다. 일본도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제도이다. 물론 보증보험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보증이 필요하다. 은행이 신용에 대한 심사평가에 기초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 스스로 심사평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또 대출관행에서 연고주의를 없애야 한다. 능력이 없어도 은행에 동창이 있으면 대출이 된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출액과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한다. 그런데 최근에 유망중소기업이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제도적인,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근본적으로는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혁파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노사관계 민주화가 실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할 수가 있다. 미시경제이론에 거래비용이라는 논의가 있다. 노사관계가 비민주적이면 상호 불신이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파업이 나서 기업주는 도망을 가고 경찰이 나섰다고 하자. 개별 기업주의 사적비용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비용은 엄청나다. 이것은 비민주적 노사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흔히 노사관계를 민주화하면 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기업주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만을 부각시키는데, 합의에 의해 결정에 이르고 합의된 사항을 노사가 성실히 수행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립·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이다. 정부 정책 실현에 유리하므로 대립·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이다. 실제 정부는 한국노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노노간의 갈등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총선을 비롯한 유동적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의석을 많이 얻든지 간에 총선 이후 정국은 보수주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대선에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법치주의 논리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들리지만 실재는 보수적인 논리이다. 세계적으로도 신보수주의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에서도 신보수주의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한편 전세세력이 흩어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와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전략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는?

초기에는 실패가 많았으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듯하다. 동남아에서 한국 기업들이 천민자본주의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어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기는 하다. 과거에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가 초기에는 임금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고 최근에는 경쟁 심화와 지역블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국내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아 해외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시험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도 재벌기업들이 다투어 진출했는데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것은 대우그룹의 300인 규모 공장 정도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공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민영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민영화를 하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민영화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나 민영화가 좋은 것은 아

니다. 이것은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스, 전기, 수도 등은 공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영국의 경우 가스와 수도를 민영화했는데 여론이 과거에는 지지했지만 지금은 비판적이다. 하지만 공기업을 지금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 공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나 공기업 경영은 많은 비합리적 요소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 정부가 참여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들을 수 있다. 공기업 내부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영화를 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이 적절한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해야 할 분야를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영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영화의 방안이나 절차는 현재 정부의 정책대로는 곤란하다.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 설명해 달라.

외국에서도 신보수주의에서 과연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전환, 복지축소 등이 그 특징인데 실제 시간적인 차이 이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만일 김영삼정권이 신보수주의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자신이 없다. 아마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WTO 출범 이후 경제의 종속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이 유명무실해 졌다. EU를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유럽 각국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다. 유럽통합이 화폐통합, 정치통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힘들다고 본다. 현재 교류화대를 위한 장애의 철폐에는 합의했지만 화폐통합을 놓고는 이해가 엇갈리고 있고 통합화폐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통합이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선진국에 속하지만 이들 사이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대체로 느슨한 연합체가 궁극적인 도달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화추세 속에서 대외적으로 지배·종속의 문제, 대내적으로는 자본·노동간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가 모든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국익을 위해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불균등 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단위 공동체가 갖는 의미와 지배·종속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노동지배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